

홍국표 의원,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법적 근거 마련... 가맹점주 보호 박차”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노동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

가 추진 중인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확실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안설명을 통해 “고물가·고금리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가맹본부와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5년부터 법규를 준수하고 가맹점주와 자발적으로 상생·협력하는 가맹본부를 선정해 인센티브

를 제공하는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현행 조례에는 해당 제도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과 지원 내용, 선정 취소 및 운영실태 점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체계적인 관리 기틀을 닦았다. 또한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위원회’를 비상설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제도를 명문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치가 행정을 뒷받침하여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라며, “법적 기반 위에서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가맹본부와 점주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거래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공정한 프랜차이즈 생태계 조성은 내수경기 회복과 시민경제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소자본 창업자들과 자영업자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수입 8억

지출 31억...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구조 위험”



경기도의회 정경자(국민의힘)은 18일(수) 열린 「2026년 제1회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실태를 강도 높게 점검하며, 지난해부터 제기해온 구조적 문제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해 제1회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서 선임된 이후, 사회복지기금의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정경자 의원은 “2025년 말 기준 사회복지기금은 약 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원 이상 감소했고, 수입은 8억 원 수준인데 지출은 31억 원을 넘었다”며 “구조적으로 지출이 수입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 점검 없이 존속만 논의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장애인복지기금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집행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체 집행률은 93.9%로 높게 보이지만, 자활기금은 82.7%, 그 중 전세자금 융자사업은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일부 사업이 수

요 예측 실패나 설계 오류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인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행률 수치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집행 사유와 개선 방향까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6년 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해 “경기도는 일반회계 세수가 부족해지자, 상시적·경상적 성격의 사업까지 기금으로 편성하고 있다”며 “기금이 사실상 일반회계의 보조 통로로 활용되는 것은 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행사성 사업까지 기금으로 추진하는 것은 복지기금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기금은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재정”이라며 “고갈 우려 속에서도 사업만 확대하는 방식은 결코 책임 있는 지방정부의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는 기금의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성과 중심의 사업 구조로 재편하는 한편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민수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 협력의 실험,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정책토론회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는 19일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초광역 협력의 실험,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충청광역연합·연합의회 및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여 개최되었다. 이에 초광역 협력 모델로서 충청광역연합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국가균형발전 체계

속에서 제도적·정책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이 맡았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소 전성만 센터장과 세종연구원 김홍주 책임연구원이 각각 ‘현 정부의 국정과제 5급 3특과 광역연합 추진전략’과 ‘충청광역연합의 제도 설계 한계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선임연구위원, 충청남도의회 강인태 수석전문위원, 국방대학교 오동진 교수, 청주시정연구원 오명근 연구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초광역 협력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에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충청광역연합이 재정·관할·운영 측면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었다. 이에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제도 개선, 지자체 간 협력체계 강화의 필요성 등이 강조됐다.

노금식 의장(충북·음성군2, 국민의힘)은 “이번 토론회는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과 함께 충청광역연합의 제도적 한계를 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연합의회도 충청권이 하나의 경쟁력 있는 권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 지하도상가 상권 회복 기반 마련



인천광역시의회가 유동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도상가의 상권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사용자 경감 적용 기간을 연장해 임대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을 예방하는 등 지하도상가 상권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한시요율, 즉 연 1천분의 30 이상 적용 기간을 기존 ‘올해 부과분’까지에서 ‘내년 부과분’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조례안 문안 역시 제5조제2항제2호 중 ‘2026년’을 ‘2027년’으로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전체 지하도상가 상인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2천140명의 상인이 사용자 경감 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전체 지하도상가 상인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2천140명의 상인이 사용자 경감 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현재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처한 경영상의 어려움과 생계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가결로 조례안은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현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 사용자 경감 적용 기간 연장을 통해 점포 운영자들의 임대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하상권의 회복과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규 의원은 “지하도상가는 많은 상인들의 생업의 현장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생활밀착형 상권”이라며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개정이 점포 운영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지하도상가 상권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을 살리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심하린 기자

천안시의회, 23일부터

제287회 임시회 개최

천안시의회가 오는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 주요 현안과 시민 생활에 밀접한 조례안 등 총 4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은 ▲충남·대전 행정통합 무산에 따른 지역 영향 점검(이병하 의원) ▲천안시 의용소방대 드론전담팀 도입 및 운영 제안(김철환 의원) ▲천안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기반 확대 제안(엄소영 의원) 등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천안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수원시의회, ‘공항 소음피해지역 민·관·군 소통 간담회’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은 19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공항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과 군, 시 관계자가 함께하는 ‘민·관·군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음피해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단체 대표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을 비롯해 수원시 공항이전추진단, 평동·서둔동 관계자, 군 관계자, 지역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공항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과 개선 요구사항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주민 피해 실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향후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과 제도적·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김정렬 부의장은 “공항 소음 문제는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수원특례시의회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진실로 배우는 동구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매력도시 **LIKE 동구**

변화와 도약의 기운이 가득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22만 구민 여러분 가정마다 희망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